

	보도자료	
배포시부터 보도가능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	
책임자	권대영 금융정책과장(2156-9710)	담당자	고영호 서기관 (2156-9711)
	최성일 감독총괄국장(3145-8300)		김영근 사무관 (2156-9712)
배포일	2015.6.15.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
			총 5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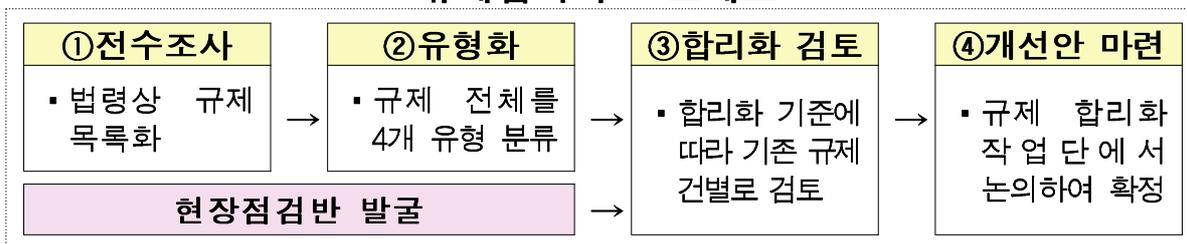
제 목 :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!
-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개최

- 금융위원회(위원장: 임종룡)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**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**하기 위한 「**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**」를 개최
 - 금융권 협회, 연구원, 금감원 등과 함께 규제개혁 **추진방향과 작업 방법**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음
- **일시/장소: '15.6.15.(월) 07:30 ~ 09:00,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**
 - **주요 참석자**
 - **금융기관(7인)** :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신협중앙회
 - **연구원(5인)** : KDI, 금융·자본시장·보험연구원, 보험개발원
 - **금융당국(14인)** :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, 금융위원회 사무처장, 금융감독원 부원장, 금융당국 실무자 등
- 앞으로 **금융규제개혁 작업반**(반장: 금융위 사무처장)과 은행·지주분과 등 **4개 분과**를 구성하여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
- ※ **별첨** :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1 금융위원장

-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**금융개혁의 절반**이자, 핵심 과제인 **금융규제개혁**을 본격적으로 추진
 - 금융개혁은 크게 **Project 형태***로 추진하는 분야와 이번에 추진하는 **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**으로 구분됨
 - * 검사·제재개선, 거래소 구조개혁 자본시장 개혁, 기술금융개선, 핀테크 활성화 등
- 이번 규제개혁은 **규제 전체를 전수조사** 및 **4가지로 유형화**하고 유형마다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**존치여부**를 판단
 - 금융규제는 법령, 감독규정, 시행세칙 등 **명시적 규제**뿐만 아니라, 행정지도, 모범규준, 가이드라인 등 소위 **‘그림자 규제’**도 전수조사
 - 금융권 협회와 연구원은 **전담팀**을 구성하여 전수조사한 규제에 대해 업계의견, 국제기준 등 합리화 기준에 따라 검토
 - 업계·연구기관에서 **개선해야 할 규제**를 「검토·제기」 하면, 금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수용하고,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「**상세히 설명·소명하거나 대안**」 을 제시

< 규제합리화 프로세스 >



- 연내 마무리 일정으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
 - 검토 완료된 과제는 즉시 확정, 여타 과제들도 빠르게 추진하고 시행령·규정 등 행정입법 사항은 연내 제·개정 목표로 **후속 조치** 추진
 - 법률개정 사항은 **일괄 법률개정 방식**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제출

-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개혁이 **마지막**이라는 각오로 추진하겠음
 - 금융규제개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·모니터링 해 나갈 것임
 - 금융권도 **내부통제제도 강화 등 자율책임문화를 정착**시키는 노력 필요

② 금융감독원장

- 금융개혁이 **금융회사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**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, 국민들이 실질적인 금융개혁의 효과를 **체감**할 수 있고 **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**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
 - 금번 금융규제 개혁은 과거와 달리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**Bottom-up** 방식과, 규제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**Top-down** 방식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
 - 금융규제체계를 **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**으로 바꾸는 **전환점**이 될 것으로 기대됨
-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**‘유사한 규제가 중복적인지,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금융회사의 부담만 늘리는지’** 등을 촘촘히 따져서 **제로베이스에서 점검**하고
 - **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세세하게 직접 규제**하기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표 등을 통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**간접적으로 규제**함으로써,
 - 금융회사가 **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역량과 책임을 키워나가도록** 하는 한편,
 - 금융규제 개혁과정에서 **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 또한 보다 철저히 해나갈 것임**

③ 주요 참석자 발언

□ 은행연합회

- ① 그 동안 금융권이 과도한 규제 탓을 하며 현실에 안주
→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당국의 변화에 화답
* 내부혁신과 변화 없이는 후진성의 책임은 금융권에 있음
- ② 혼연일체의 리더십이 금융위/금감원의 중간간부에도 정착되어야
규제개혁의 성과 지속 → 당국 직원 평가제도 필요
- ③ 네거티브 시스템, 전업주의 완화 등 장기과제도 방향성 제시

□ 금융투자협회

- ①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책임을 강화 → 금융사 자율성 확대
- ② 세세한 행위 규제 및 숫자에 매몰된 감독 지양
- ③ 글로벌 위기 이후 훼손된 자본시장법 제정 본연의 정신[포괄주의, 원칙중심 감독] 반드시 복원

□ 여신금융협회 : 금융사고 후 남아 있는 일부 과도한 모범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정비 필요

□ 신탁중앙회 : 업권별 규제 차등화, 동일 업무/동일 규제 강조

□ 저축은행중앙회 :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업계 자율적 결정사항에 당국과 사전 협의(예 : 모범기준 개정시 사전협의) 필요
→ 업계의 자율적 결정사항을 명확화하고 사후보고로 대체

□ KDI : 비용·편익 분석 절차 준수 등 규제개혁의 지속가능성 중요

□ 금융연구원 : 금융권의 자율책임 강화가 규제개혁의 핵심
[CEO의 책임 구체적 부여 → 이사회가 평가·감독하는 환경 조성]

□ 자본연구원

- ① 금융사 혁신 DNA 부족 ← 금융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혁신기업
- ②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육성 필요
- ③ 금융사고 후 방향성 없는 규제 강화에 대한 반성

□ 보험연구원/보험개발원/생·손보 협회 : 위험 평가 및 Pricing에 있어 그림자 규제를 축소하고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 필요

1단계 : 금융규제 전수조사 / 유형화

- ① 금융규제 전수조사(법령, 규정, 세칙, 행정지도, 모범규준, 협회 자율규제 등)
- ② 금융규제를 4개 유형(시장질서, 소비자보호, 건전성, 영업행위)으로 유형화 → 협회·연구원 TF 전달

금융위·
금감원



2단계 : 규제 개선방안 마련

- ① 협회는 업계의견 수렴, 연구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선진사례 등 조사를 중심으로 규제를 점검
- ② 개별 규제에 대해 규제합리화 기준 7개* 적용
 - * 사전규제→사후책임 강화, 글로벌 기준에 부합, 오프라인→온라인, 포지티브→네거티브, 업권별·기능별 규제수준 맞춰 경쟁촉진, 금융사고 등으로 강화된 규제정비,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
- ③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→ 금융당국 전달

협회·
연구원 TF



3단계 :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회의 논의·개선안 확정

- ① 협회·연구원 TF 개선안에 대해 분과위 검토
→ 이점이 있는 사항은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회의 상정
※ 금융당국은 불수용과제에 대해 대안제시 또는 합리적 사유 소명
- ②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확정

분과위 검토
↓
금융규제개혁
작업단



4단계 : 신속한 후속조치

- ① 시행령, 시행규칙, 규정, 기타 그림자 규제 등
→ 즉시 개정(연내 완료 목표)
- ② 법률 개정 → 하반기 법안 마련(일괄개정 방식)
→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

금융위·
금감원